

일본 신(新)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과 향후 전망

이형근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el: 3460-1069)

김은지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Tel: 3460-1035)

차 례 ●●●

1. 2012년 중의원 총선 결과
2. 신(新) 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 ▶ 지난 12월 16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2009년 118석 → 2012년 294석)이 민주당(2009년 233석 → 2012년 57석)에 압승을 거두었음.
 - 이러한 선거 결과는 자민당에 대한 지지확대 측면보다는 지난 3년간 민주당 정권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적 성격이 강함.
- ▶ 자민당의 정권공약은 기존의 민주당 정책과는 상반되는 기조로 일본의 경제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정책: 자민당 정권은 ‘국토강인화’ 전략을 통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금까지의 공공사업 억제를 통한 재정개혁 노선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음.
 - 금융정책: 이번 총선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제금리 상승과 정부부채의 이자상환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통상정책: 자민당의 집권으로 ‘영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TPP 교섭은 지연될 전망이다.
 - 에너지정책: 자민당 정권은 탈원전 정책에서 탈피하여 조건부 원전재가동 방침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됨.
- ▶ 자민당은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경제재생’ 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됨.
 - 자민당은 디플레이션엔고로부터의 탈각을 최우선으로 명목 3%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재생’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
 - 이르면 1월 중에 대규모 공공사업(10조 엔 규모)을 중심으로 한 경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대담한 금융정책과 공공사업 중심의 재정정책은 장기금리 상승, 재정재건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됨.

1. 2012년 중의원 총선 결과

가. 선거 결과

■ 12월 16일 실시된 제46회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는 야당 자민당의 압승, 여당 민주당의 참패로 요약됨.

-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총 490개 의석 중 자민당이 294석을, 공명당이 31석을 획득하며 3년 3개월 만에 정권교체를 이룸(표 1 참고).
 - 자민·공명당은 연립 기준으로 325석을 차지하여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법안 재가결이 가능한 2/3 의석 수(320)를 확보하는 데 성공함.
- 민주당은 기존 의석 수(233)의 1/4 수준인 57석을 차지하는 데 그치며 참패함. 이는 1998년 4월 민주당 결당 시의 93석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유신당은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내각불신임 의결안 및 예산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의석 51석을 상회한 54석을 획득함.
 - 극우 성향의 이시하라(石原慎太郎)가 이끄는 유신당은 '제3세력'으로 정치적 기반을 크게 강화하며, 연립정권 구축과 정계개편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였음.

표 1. 중의원 선거 이후 정당별 의석 수의 변화

	획득 의석 수			기존 의석 수	선거 후 의석 변화
	소선거구	비례대표	당선 의석 수		
자민당	237	57	294	118	118 → 294
민주당	27	30	57	233	233 → 57
유신당	14	40	54	11	11 → 54
공명당	9	22	31	21	21 → 31
다함께당	4	14	18	8	8 → 18
미래당	2	7	9	62	62 → 9
공산당	0	8	8	9	9 → 8
사민당	1	1	2	5	5 → 2
대지당	0	1	1	3	3 → 1
국민신당	1	0	1	2	2 → 1
일본당	0	-	0	1	1 → 0
개혁당	-	0	0	0	0 → 0
제파당	0	0	0	0	0 → 0
무소속	5	-	5	8	8 → 5
합계(의석수)	300	180	480	479(결원1)	

자료: 각 언론자료를 토대로 작성.

나. 선거 결과 요인 분석

- 자민당의 압승 요인이자 민주당의 참패 요인은 단적으로 지난 3년간 민주당의 정책추진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있음.
- 아베 자민당 총재는 이번 선거의 압승에 대해 ‘자민당이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민주당이 가져온 정치혼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밝힘.
 - 최근 자민당의 지지율이 23%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자민당의 압승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자민당의 기존 통치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인 경기대책에 대해 자민당은 선거공약으로 ‘디플레이션 탈피’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담한 금융완화, 건설국채 발행 등 적극적인 경제부흥’ 전략을 강조하였는데, 이 점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평가됨.¹⁾
- 민주당의 참패는 동일본대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내우외환’의 위기상황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권 출범 시 지지받았던 민주당의 주요 정책공약들이 좌초된 데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에 기인함.²⁾
 - 민주당은 ‘정치 주도’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정책결정 시스템 내에서 의사소통 부재 및 정보교류 격차를 초래하여 정책실무가 정체되는 혼란을 야기하였음.
 -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공약인 어린이수당, 고교수업료 무상화는 민주당 스스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재원마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 공약시행이 수정·포기되면서 애초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이번 총선의 투표율 59.3%는 2009년 총선의 62.3%보다 10%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이며, 전후 최저치(1996년 59.7%)보다 낮은 수준임.
 - 마쓰야마(増山 幹高)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는 ‘제3세력’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자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대한 실망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다”라고 분석함.

2. 신(新) 자민당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

■ 자민당 정권공약의 키워드와 4대 재생 분야

- 자민당이 11월 21일에 발표한 「정권공약집」의 키워드는 ‘되찾는다’이며, 이는 위기상황에 빠진 일본의 각 분야를 재건하겠다는 의미임.³⁾

1) 毎日新聞(2012), 「2012衆院選「景気」最重視争点に「震災復興」「原発」は7%にとどまる」(12月11日). 마이니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경기대책(32%)’이 최우선 쟁점으로 부각됨. 그 다음으로 ‘연금·의료·간병·육아(23%)’, ‘소비증세·재정재건(10%)’ 순으로 나타남. 반면, ‘동일본대지진 부흥’과 ‘원자력발전·에너지정책’ 같은 중장기 과제는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日本総研(2012), 「各党の総選挙マニフェストに求められること-2009年マニフェストの実績検証を踏まえて-」, (12月22日)

3) 자민당 정권공약의 자세한 사항은 부표의 요약 정리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이를 위해 먼저 동일본대지진의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어서 4대 재생 분야(‘경제재생’, ‘교육재생’, ‘외교재생’, ‘생활재생’)를 명시하고, 또한 ‘자민당정책BANK’에서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함.
- 이하에서는 이번 총선과정에서 자민당이 제시한 재정 및 금융 정책, 통상정책, 에너지정책이라는 4대 경제정책의 핵심 내용과 과제를 검토함.

가. 재정정책

- 자민당과 민주당은 2015년도까지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규모를 2010년도 기준으로 반감하고, 2020년까지 흑자화한다는 재정재건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표 2 참고).
- 자민당은 재정재건을 위해 중앙·지방 공무원 인건비 삭감(연간 2조 엔), 생활보호급여 삭감(8,000억 엔)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외의 구체적인 세출삭감 항목은 명시하지 않음.
- 아베 총재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포함한 ‘국토강인화’ 전략을 통해 세출확대를 단행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세출억제를 도모할 계획임.
-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2012년 6월 국회에 제출한 「국토강인화기본법」⁴⁾을 토대로 3년간 피난도로·쓰나미 피난시설, 구호체계 정비 등 방재대책을 강화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해 자민당 정권은 10조 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여 공공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계획임.
- 한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자민당은 자조자립을 제1원칙으로 하는 현행제도를 기본으로 유지하되, 고액 의료비 상한을 인하하고 생활보호 급여수준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아베 총재는 ‘경제성장 없이는 재정재건도 없다’라는 기본노선을 강조하고 있는바, 향후 이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되면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민주당 정권하에서 소비세는 2014년 4월(5% → 8%)과 2015년 10월(8% → 10%) 2회에 걸쳐 인상하는 방침이 채택됨.
- 단, 시행조건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가 시행 6개월 이전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됨.
- 아베 총재는 소비세 인상에 대해 2013년 가을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4) 「국토강인화기본법」과 「자민당 정책공약」에는 관련 예산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0년간 200조 엔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표 2. 자민당과 민주당의 재정정책 비교

정책	자민당	민주당
재정건전화	- 2015년도 기초재정수지의 적자를 50% 삭감 (2010년도 대비) - 2020년도까지 흑자화	- 2015년도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50% 삭감 (2010년도 대비) - 2020년도까지 흑자화
공공사업	- 10년 동안 '국토강인화'를 추진. 피난도로·쓰나미 피해시설, 구호체제 정비 등을 강력 추진 - 3년간 도로망 정비 등에 집중적 대응	- 4년간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근절 - 공공사업(하드)에 치중하지 않고, 지역의 방재력을 강화
사회보장제도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자조자립을 제1원칙으로 하며, 공적·공공 지원을 조합 -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으로 하며, 소비세는 전액 사회보장에 활용 - 「생활보호법」 개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근절	- 사회보장세제 통합개혁을 토대로 보육원 이용자 증대,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연금수급자격 기간 단축, 저연금자 급여금 지급 등 -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

자료: 자민당정권공약 및 민주당 정권공약집을 참고로 하여 작성.

나. 금융정책

■ 자민당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정부와 일본은행의 협력 강화를 통한 대담한 금융완화 실시를 주장한바, 이는 이번 총선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이슈였음.

- 자민당은 정권공약집에서 디플레이션 대책으로서 '명확한 물가목표(2%)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행법의 개정을 포함해 정부와 일본은행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할 것을 주장함(표 3 참고).
- 반면 민주당은 '2014년에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정부와 일본은행이 하나가 되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임.

표 3. 자민당과 민주당의 금융정책 비교

정책	자민당	민주당
금융정책	-명확한 물가목표(2%) 설정 -일본은행법의 개정 및 정부와 일본은행의 협력강화를 통해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	-2014년도에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 -2012년 10월에 최초로 작성된 합의문에 근거하여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정부·일본은행이 하나로 되어 최대한 노력

자료: 日本經濟新聞(2012), 「衆議院 公約特集」, 4~5面. (12月03日)

■ 대규모 양적완화는 2000년대 초반에도 실시된 바 있으나, 경기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음.

- 또한 대규모 양적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요국과의 환율전쟁 격화,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장기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정부부채의 이자상환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이에 따라 자민당이 총선과정에서 제기한 '일본은행의 건설국채 직접 인수, 무제한의 금융완화, 일본은행 총재의 해임권, 마이너스 금리' 등은 정권공약집에 포함하지 않는 등 일본은행에 대한 압박 강도는 약화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어느 수준까지 협력하여 디플레이션 및 엔고에 대응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됨.
- 아베 자민당 총재는 12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내각 발족 후 즉시 2%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일본은행과 공유하는 정책협정(accord)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할 것”이라고 표명함.⁵⁾
- 일본은행은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19~20일 개최)에서 자민당이 공약으로 내건 ‘물가목표’에 대해 논의한 다음, 2013년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행의 현행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1%임.

다. 통상정책

- 자민당은 FTA에는 적극적이지만 TPP에는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는 등 대외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표 4 참고).
- 자민당은 EPA·FTA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TPP 교섭 참가에는 반대 입장을 제시해왔음.⁶⁾
 - 자민당은 ‘성장하는 아시아경제권의 대응, 전략적인 해외투자과 FTA, 국제자원전략’을 내세우며 글로벌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예외 없는 관세자유화에 대한 반대 입장과 자국의 농업보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민주당은 ‘국익확보를 대전제’로 TPP와 한·중·일 FTA, RCEP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가입을 위한 최종 판단은 정부가 결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음.
- 자민당의 집권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TPP 협상 자체가 지연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하세가와(長谷川) 경제동우회 대표는 자민당 신정권에 대해 “TPP 추진과 관련하여 참의원 선거(2013년 7월 예정) 이후로 연기하지 않고 조속히 교섭참가를 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TPP 교섭에 조건 없이 참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표 4. 자민당과 민주당의 통상정책 비교

정책	자민당	민주당
대외 경제정책	- EPA·FTA를 적극 추진 -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TPP 협상 참가 반대	- TPP, 한중일 FTA, RCEP을 동시병행 추진

자료: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2012), 『Mizuho Short Industry Focus』, 第40号, (12월10일)

5) 『日本経済新聞』(2012.12.18), 「日銀 物価目標を議論」, 3면.

6)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2012. 12. 10), 「主要政党別みた政権公約の比較」, Mizuho Short Industry Focus, 第40号.

라. 에너지정책

■ 자민당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각 정당 가운데 가장 신중한 입장을 표명함.

- 자민당은 정책공약집에서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10년 이내에 새로운 전원(電源) 구성 확립’ 및 ‘3년 이내에 원전 재가동 여부에 대한 결론 제시’를 주장함(표 5 참고).
- 반면 민주당은 ‘2030년대 원전가동 제로’, 공명당은 ‘가능한 한 빨리 제로로 하며, 재가동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여 판단’, 사민당·공산당은 ‘즉시 제로’를 주장함.

표 5. 자민당과 민주당의 에너지·원전 정책 비교

	자민당	민주당
에너지·원전	- 3년간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 에너지절약(효율화)을 최대한 추진 - 원전 재가동의 가부는 순차적으로 판단. 3년 이내에 모든 원전에 대한 결론을 제시 - 중장기 에너지 정책으로서 늦어도 10년 이내에 지속가능한 ‘전원구성의 최적 조합’을 확립	- 원전의 40년 운전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원자력위원회의 안전 확인을 거친 것만 재가동 - 원전의 신설, 증설은 추진하지 않음. - 2030년대에는 원전가동을 제로로 하기 위해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

자료: みずほコーポレート銀行(2012), 「主要政党別にみた政権公約の比較」, 『Mizuho Short Industry Focus』, 第40号, (12月10日)

■ 2009년 총선 당시 민주당은 정권공약집에서 에너지 안정공급체제 확립,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등을 도모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상황이 크게 변화하면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곤란하게 됨.

- 당초 민주당은 원전이용의 착실한 추진,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확대(2020년까지 10%), 전량고정가격매입제도 도입, 온실효과가스의 대폭적 감축(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 국제사회에서의 포스트교토의정서 논의 주도 등을 추진함.
-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기본계획의 미수립,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철회 등 주요 정책의 추진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함.
 -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 7월에 전량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한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됨.

■ 정권을 탈환한 자민당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원전의 중장기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자민당은 정책공약집에서 에너지대책에 대한 결론 제시를 수년 이후로 연기하고 있고, 조건부로 원전재가동 용인을 시사함.
- 자민당은 일본 에너지정책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높은 안전성, 지속적 경제성장, 환경 배려(지구온난화 대책) 등을 고려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대책의 수립이 요구됨.

3. 평가 및 전망

■ 이번 12·16 중의원 총선거는 예상대로 자민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는데, 여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 정권의 실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의 명목 GDP는 2011년 470조 엔으로 민주당의 집권 전년도인 2008년(501조 엔)과 비교해 30조 엔 정도 감소함. GDP 성장률도 2011년도에 -0.6% 성장한 데 이어 최근 2분기(2012년 2/4분기 및 3/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함.
 -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정치적 리더십을 갖지 못한 채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서 71명이 탈당(이들은 일본미래당 및 일본유신회 후보로 입후보했으나, 오자와씨만 당선되고 나머지 70명은 모두 낙선)함.
 -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미군기지(오키나와 후텐마기지) 문제 발생 등 외교마찰도 심각함.
- 한편 총선 이후 실시된 공동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정권탈환에 대해 환영 33.3%, 무반응 47.5%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총리가 될 아베 총재에 대해서는 기대 51.2%, 비(非)기대 44.4%로 나타남(도쿄신문, 12월 19일 조간).
 - 이전 총선(2009년)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하토야마 신임총리에 대한 기대가 71.1%였던 점을 감안하면, 자민당의 정권탈환과 아베 총리(예정)의 재등장에 대해 일본 국민들이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디플레이션 탈피 및 엔고 대응을 약속한 자민당이 집권하게 됨에 따라 주가상승 및 엔화환율 상승 등의 호조세를 시현하고 있음.

- 닛케이 주가지수는 12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10,000엔을 돌파하여 지난 3월 28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엔화 환율은 1달러당 84엔대로 올해 초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환율상승)함.
 - 또한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는 12월 20일 0.780%를 기록하며 엔화 약세 및 주가상승을 배경으로 11월 2일 이후 가장 높게 상승함.
- 한편 최근의 주가상승은 ‘대담한 금융완화’에 대한 기대에 선행하여 부응한 결과로서,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로 볼 수 있으며, 국채금리 상승은 자민당 정권의 공공투자 확대(즉, 재정규율 해이) 예상에 따른 ‘나쁜 금리상승’이라는 해석이 가능함.
 - 엔화 약세는 자민당의 엔고 대응 기대뿐만 아니라 11월 사상최대의 무역적자 기록 및 경상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와 미국에서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논의 진전 등 여타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엔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아베 총재는 총리에 임명(12월 26일 예상)된 후 단명 정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목표로 ‘경제재생’ 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됨.(부표 참조)

7) 일본은 중의원 총선 후 2주일 전후로 소집되는 특별국회에서 다수당 대표를 총리로 선출함.

- 2006년 이후 일본의 내각지지율은 내각구성 이후 3~4개월의 단기간에 대폭적으로 하락하였던 점에 비추어, 출범 초기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간에 개혁정책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o 2006년 이후 역대 총리의 임기는 15개월을 넘기지 못하였음.
 - o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석 절반에 대해 선거가 진행되는바, 차기 참의원 선거가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음.
- 이르면 1월 중에 대규모 공공사업(10조 엔 규모, 재원은 세입증가분 및 건설국채 발행 상정)을 중심으로 한 경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 o 현 일본은행 총재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대담한 금융완화 및 인플레이 목표 추진에 열의가 있는 인사를 2~3월 중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선임할 것으로 전망됨.
 - o 또한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8%)은 6개월 전(2013년 10월경)의 경기상황 판단에 좌우되므로, 결국 2013년 상반기의 경제실적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대담한 금융정책과 공공사업 중심의 재정정책은 장기금리 상승, 재정재건 신뢰도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됨.

부표. 자민당의 정권공약 중 경제정책 부문 요약

분야	주요 내용
경제재생	-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잃어버린 국민소득 50조 엔 탈환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축소균형의 분배정책’에서 ‘성장에 의한 부(富)의 창출’로 전환 도모 - 디플레이션·엔고로부터의 탈각을 최우선으로 명목 3%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 [일본경제의 새로운 모습] - 5년간의 집중개혁으로, ‘세계 제일의 기업이 활동하기 쉬운 국가’, ‘개인의 가능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고용과 소득이 확대되는 국가’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해외투자수익의 국내 환원을 일본의 성장에 연결시키는 새로운 국제전략(‘산업투자입국’)을 추진 - ‘산업투자입국’과 ‘무역입국’이라는 쌍발형 엔진이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입국’을 목표로 함. [디플레이션·엔고대책] - 명확한 ‘물가목표(2%)’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행법의 개정을 포함해 정부와 일본은행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 - 재무성과 일본은행, 나아가 민간이 참여하는 ‘관민협조외채펀드’를 창설하고, 이 기금으로 외채를 구입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탄력적인 경제재정 운영] - 향후 2~3년은 국내경기의 침체와 국제 리스크(유럽 위기, 신흥국의 경기감축)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경제재정 운영을 추진 - 신(新)정권 발족 후 신속하게 ‘제1탄 긴급경제대책’을 단행하고, 본격적인 대규모 추경예산과 2013년도 예산을 합하여 빈틈없는 경제대책을 실행 [성장전략 추진] - 일본경제재생본부에 ‘산업경쟁력회의’를 설치하여, 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한 목표정책(targeting policy)을 추진. 우선적으로 ‘국민적 과제를 해결하여 세계에 전개 가능한 전략목표 설정’(“건강 장수 세계 제일” 등), 나아가 핵심기술에 대한 집중투자, 제도개혁 등의 정책을 추진 [대담한 규제완화] - 전략분야별로 기업 활동의 편리성을 세계 최첨단으로 하기 위해 ‘국제첨단 테스트’(국제수준과 비교하여 국내의 제도적 장애를 철폐하는 기준) 도입 [닛폰산업재흥플랜] - 세계에서 싸워 이기는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일본경제재생·산업경쟁력강화법’(가칭)을 제정하여, 첨단설비 투자의 촉진, 혁신적 연구개발에의 집중투입, 장기자금에 대한 정책금융의 강화(‘융자’에서 ‘출자’로)를 도모 - 일본의 입지경쟁력 부활(해외유출 방지)을 위해 엔고·디플레이션 대책과 함께 이노베이션 기반의 강화와 법 인세의 대담한 인하를 실시 [국제전개전략] - 일본경제재생본부에 ‘국제경제전략회’를 설치하여, 성장하는 아시아 경제권을 수중에 넣고, 전략적인 해외 투자와 경제연대협정 및 국제자원전략을 전개 - 쿨 재팬(콘텐츠·의식주)의 국제 전개, 일본이 세계 최첨단인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과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기관의 국제화를 추진 - 메탄 하이드로 레이트·희토류 등을 포함한 해양자원 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등을 통해 자원대국으로의 전환을 도모
에너지	[현재 및 후세의 국민생활에 책임을 지는 에너지전략의 확립] - 어떠한 사태·상황에서도 사회·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에너지 공급 안전에 만전을 기함. - 모든 에너지의 가능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과 함께,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좋은 경제·사회구조의 확립을 목표로 함. - 당면의 최우선과제로서 3년간 재생가능에너지의 최대한의 도입, 에너지절약의 최대한 추진을 도모 - 원자력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안전제일’의 원칙하에 독립된 규제위원회에 의한 전문적 판단을 어떤 사정보다도 우선함. 원전의 재가동의 가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3년 이내에 결론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함. 안전성에 대해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에 위임함. -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으로서 장래의 국민생활에 책임을 지는 에너지전략의 확립을 위해, 판단의 연기는 피하면서 늦어도 10년 이내에는 장래에 걸쳐 지속가능한 ‘전원구성의 적정한 조합(best mix)’을 확립함. 그 판단에 있어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새로운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부표, 계속

분야	주요 내용
에너지	[자원·환경] - ‘자원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종래의 화석연료에 더해 메탄 하이드로 레이트와 희토류 등도 포함한 해양자원개발에의 집중투자과 도시광산의 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의 공급체제 강화 및 ‘자원소국에서 자원대국으로’의 전환을 도모 - 세계 유수의 일본 환경기술을 구사하여 CO2삭감과 녹색(green)의 창출, 생물다양성보전, 대기·물·토양의 환경대책을 추진
농림수산업	- 농림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상공 연계 강화를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공격적인 농림수산업’을 전개 - 농가소득 향상·담당자 육성, 농지의 유지·농림기반 정비, 농산어촌의 유지·발전을 위해 정권교체 후 대폭적으로 삭감된 농림수산업예산을 부활시킴.(규모 확대를 위한 대응, 농업농촌기반 정비사업, 농업용 시설기계 정비, 삼림정비, 어항·수산 관련 시설정비 예산 등) - ‘호별소득보상’에서 ‘농지를 농지로서 유지하는 지원책’으로 대체 확충을 실시(‘다면적 기능 직접 지불법’) - 신규 취농·경영 계승을 지원하는 등 담당자의 육성 확보 대책을 추진(‘담당자종합지원법’) - 사료 급등 대책·경영안정대책 등 수급안정·수출대책을 강화 - 삼림흡수원 대책을 위한 안정 재원 확보, 확실적인 삼림경영계획의 발본적인 개정, 다면적인 기능을 평가한 삼림·산촌 유지의 직접 지불 제도의 창설, 국산 목재의 이용 촉진과 목재 문화의 보급,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 촉진, 목재가격 안정 대책의 강화, 간벌·도로망 정비의 충실 강화, 재해에 강한 삼림조성, 위법벌채 대책의 강력한 대응, 산촌진흥대책의 발본적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 연료용 유류(燃油) 급등 대책의 확충·신규취업지원제도에 의한 어업·수산업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산물의 소비 확대, 어식 보급 대응 강화 [TPP] -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TPP 협상 참가에 반대 [식료안전보장] - 식료자급률 및 식료자급력(농지·물 등의 농업생산기반, 농업자, 농업기술)을 유지 향상시킴.

자료: 自民党(2012), 『政策パンフレット』.